민주 쇄신의 칼날 '내년 총선 공천 룰' 겨냥하나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다음 행보 주목
일반국민 100% 경선 등 거론…확정 한달만에 새 룰 부작용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지난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 혁신의 칼날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겨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 20일 혁신위 첫 회의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공천룰 손질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공천 룰을 잘못 건드릴 경우, 계파간의 충돌 등 당내 분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연 혁신위가 국민적 눈높이 충족과 당내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 허들을 잘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출범 사흘 만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강경 혁신안을 내놓음에 따라 이번 주에는 숨 고르기를 하면서 도덕성 강화 방안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조만간 '현역 의원 기득권' 축소를 비롯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현역 의원이 당초 2~3명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해식 의원 1명에 그친 점도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 준하는 공천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혁신위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를 구성해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 등의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국민 100% 경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엔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 폐해의 최소화라는 명분도 담겨있다. 또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장들의 암묵적인 경선 개입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들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넓히고 당원 참여를 좁히는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룰이 이미 지난 5월 확정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룰이 제기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천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결정짓는 만큼 저항이 거세고, 자칫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벌써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혁신안이 '비명계 학살'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정성 및 정량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컷-오프를 도입할 경우, 말 그대로 공천 학살 등 각종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내 비명계 핵심 관계자는 "혁신은 공정이 핵심"이라며 "특정 계파 배제가 의심이 되는 혁신안은 아예 내놓지 않는 것이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혁신 공천룰 마련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 등 헌신이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류의 그늘에 안주하기보다 시대에 헌신하는 모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6·25 기념식서 만난 여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편, 혁신위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마치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거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서도 헌법상 권리 포기를 모든 의원에게 강제하는 게 법리상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 권리에 대해 가타 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당내 인사를 겨냥한 잇따른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당의 입장과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다소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을 찍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혁신위는 비공개로 주 2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노란봉투법 30일 표결 앞 여야 충돌 조짐

민주, 논스톱 의결 방안 검토…국힘,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 방침

여야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충돌이 세 번째로 재연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취지가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양곡법·간호법 때처럼 의석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까지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며 "'파업 양산법' 문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돌아온 이낙연 "못다 한 책임 하겠다" 정치행보 시사

1년간 미국 유학 마치고 귀국…"윤 정부, 국정 재정립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4일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잘 다녀왔다.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와 메시지 발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와 복지도 뒷걸음질 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기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하다"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일본을 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에는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말했고, 러시아에는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당 혁신위 출범과 관련한 당내 상황, '수박깨기' 등 강성 지지층 행동에 대한 견해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유학 생활을 해왔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내달부터 전국 순회 강연을 하면서 활발하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 나설 전망이다.

강연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귀국 직전에도 조지워싱턴대와 독일 베를린자유대 등에서 강연을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친낙(친이낙연)계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당내 비주류 규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